

가상자산 Bi-Weekly Market Recap

6월 3주차: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전환점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INEX 전략기획팀 Analyst 전대은 danny@inexkr.com

시황 Summary

가상자산 시장은 6월 들어 미중 무역 협상 진전과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양국 간 상호 보복 공습이 이어지면서 전면전으로의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후퇴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에 따른 수혜 기대가 반영되며 KAIA, MEV, BORA 등 일부 국내 프로젝트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 심리 위축으로 인해 가상자산을 비롯한 위험자산 전반이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 만큼, 단기적 투자 대응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Key Issue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의의

6월 10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단편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 중심의 틀을 넘어, 제도권 내에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고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가상자산 업종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허용, 유동성공급자(LP) 제도 활성화, 매매업·보관업·중개업에 한한 신용공여 허용 등을 통해 산업 성장을 고려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매매·수탁·중개·신용공여 등 간의 겸영이 가능한 구조로,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종합 디지털자산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높은 진입 장벽 또한 함께 설정하였다.

이번 입법의 가장 큰 의의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자금세탁방지(AML), 이용자 보호, 공시 의무 강화 등 금융업에 준하는 규제와 감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외형 성장과 함께 내실 있는 인프라 구축과 신뢰 확보로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준금융업에 해당하는 포지셔닝을 확보하고, 기관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주간 가상자산 시장 주요 이벤트

INEX 소식

토큰포스트랩스, 신생 거래소 인엑스 초기 참여 [\(전문\)](#)

글로벌

이스라엘, 이란 군 수뇌부 폭격...중동 다시 전쟁 위기 [\(전문\)](#)

中 최대 핀테크 애플그룹, 홍콩-싱가포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 추진 [\(전문\)](#)

국내

민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신속 추진" [\(전문\)](#)

블룸버그 "텐센트, 넥슨 인수 검토 중" [\(전문\)](#)

가상자산

바이비트, 솔라나 기반 자체 DEX '바이리얼' 공개 [\(전문\)](#)

모포, 기관 수요 겨냥한 고정금리맞춤형 대출 서비스 출시 예정 [\(전문\)](#)

규제

미 SEC,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 또다시 연기 [\(전문\)](#)

홍콩, 8월부터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디지털자산 제도화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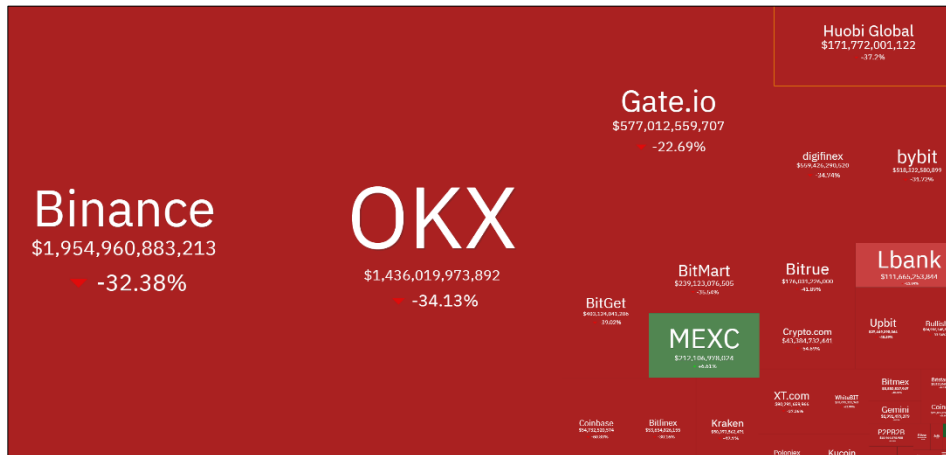
솔라나 현물 ETF, 승인 신호탄?...美 운용사들 S-1 수정 제출 [\(전문\)](#)

Upcoming 주요 일정

일자	관련 자산	이벤트 내용
2025-06-17	-	G6 정상회의 (15일 ~ 17일)
2025-06-18	-	미국 FOMC 금리 발표
2025-06-19	BTC	BTC 프라하 2025 행사
2025-06-25	ZIG	지그체인(ZIG) 메인넷 출시
2025-06-30	FLOKI	플로키(FLOKI) 발할라(Valhalla) 메인넷 출시

2 주간 가상자산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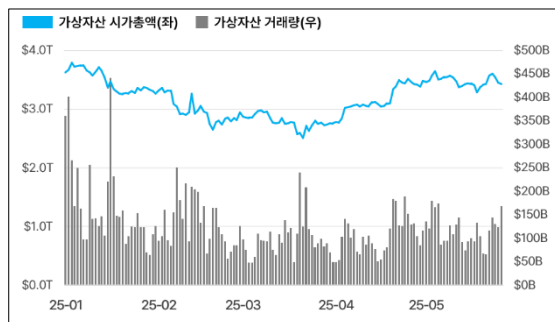
전월 대비 가상자산 거래소별 거래대금 (1Month)



참고: 각 거래소별 최근 30일 거래대금 히트맵(Heat Map)

자료: Coin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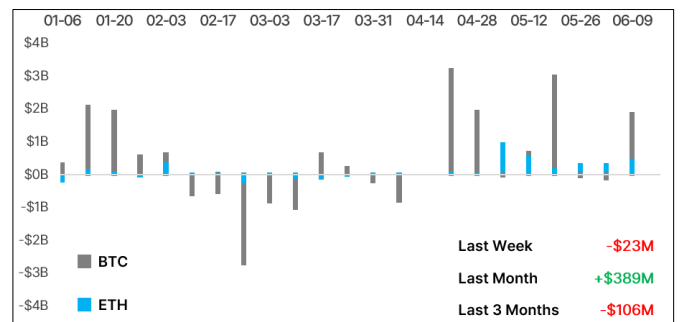
가상자산 가격 현황 (1year)



참고: 최근 1년 가상자산 시가총액 및 거래량

자료: Coingecko

가상자산 ETF Flows (YTD)



참고: BTC, ETF Spot ETF Flows

자료: CoinMarketCap(CMC)

Comments

최근 2주간 가상자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6월 13일 발생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및 군 지휘부 공습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각각 -0.2%의 소폭 하락을 기록하며 이전 상승분을 반납하였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주 전 대비 +0.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 충돌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 역시 약화되고 있다. 충돌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은 이스라엘-이란 간 갈등의 확산 여부, 미국의 금리 인하 실현 가능성, 그리고 가상자산 현물 ETF의 자금 유입 지속성 등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3

주간 인사이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가상자산,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는 거래소

2025년 6월, 가상자산 시장을 금융산업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기존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 중점의 법안이었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실물경제 및 전통 금융과 구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	세부 설명
디지털자산 정의·업권 세분화	명확한 법적 정의, 10 개 업종으로 세분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5억 이상 자기자본, 금융위 인가제, 준비금·환불 제도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로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추진력 및 실행 속도 확보
인가·등록·신고제	금융위 중심, 시장 진입 투명성 강화
투자자 보호·불공정거래 금지	도산절연 구조, 불공정거래 처벌
발행 및 유통 공시	발행신고서 공시 및 유통 공시 제도화
신용공여(레버리지 거래) 허용	매매·중개·보관업에 한정
기존 법령 폐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체

전통 금융과의 연결: 산업구조의 고도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적인 전환점 중 하나는,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과 분리된 실험적 영역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일환으로 구조화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인가제로 허용됨에 따라, 디지털자산은 결제·송금·청산·정산 등 기존 금융의 백엔드 인프라 기능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진입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토큰 발행'이 아니라, 발행자의 재무건전성, 환불준비금 보유, 도산절연 조치 등이 법률로 강제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은행, 카드사, 핀테크, 증권사 등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 발행자 또는 거래지원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합성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또한, 집합관리업(펀드), 일임업(개별 운용), 자문업 등 전통적인 자산운용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Web3 기반 금융상품이 제도권 안에서 설계·유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실질적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상품'으로 자리잡는 구조의 시작점이며, 기존 자본시장과 교차되는

크로스마켓 구조(예: 디지털자산 기반 MMF, ETF, 채권형 토큰 등)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

거래소 중심의 산업 재편: 통합 인프라로의 진화

법안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수혜자는 중개업·매매업·보관업 인가를 모두 취득한 '거래소'임을 알 수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겸업 허용 구조를 용인하고 기존 거래소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면서 거래소라는 형태를 단순한 거래 플랫폼이 아닌 시장의 유통 질서와 공정성을 담당하는 준금융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며 중개업·매매업·보관업에 한해 신용공여(자금 대여)가 허용되었으며 이는 중개업·매매업·보관업 인가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중심으로의 산업 재편을 예상된다. 거래소가 인프라를 수직 계열화하여 통합 제공하는 구조로 변화하며 디지털자산 매매·보관·중개를 넘어 신용공여, 디지털자산 상품 중개, 디지털자산 담보대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개(IEO)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 진화하게 된다.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법제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더 이상 금융의 '외부'가 아닌 내부로 흡수되는 구조가 마련되었음을 뜻하며, 그 중심에는 인가를 통해 제도권에 편입된 거래소가 있다. 거래소는 이제 단순한 유통 플랫폼이 아니라, 자산의 발행, 유통, 보관, 심사, 공시, 감시까지 아우르는 금융 인프라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금융위가 관리하는 '인가제 기반 시장'인 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까지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은 향후 기관투자자, 전통금융,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레이어를 확보하게 되었다. 결국 이 법은 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성장·투명성·연계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